탄 원 서

제출 법원	사건 담당 재판부 귀중 [현재 재판부·사건번호 제출 전 확인]
대상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혐의 및 절차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관련 직권남용
사건번호	_____ [공식 사건검색 후 기재]

1. 시민으로서 드리는 탄원

저는 피고인 김주현과 친족·친분 관계가 없는 시민이며 전체 재판기록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의 지휘 권한과 직권남용 요건를 사실과 증거로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함이나 인품을 직접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중대한 사건일수록 개인의 실제 행위와 고의, 책임 범위를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올립니다.

2. 현재 확인되는 사건 경과

특검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성급하게 처리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기소했습니다. 2026년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2026년 8월 결심공판에서 종합특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0월 26일 선고 예정이라는 보도는 있으나 실제 선고 결과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개인별로 가려야 할 사실

후보자 검증 의뢰·자료 접수·보고서 작성·결재의 실제 순서와 법적으로 의무화된 최소 검증 절차가 무엇인지 대조해 주십시오. 민정수석이 직접 지시한 행위와 부하직원의 독자적 실무 처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4. 반대되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부적절하거나 성급한 인사검증과 형법상 직권남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직권 행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그 결과와 고의가 공소사실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5. 적용 법률과 판단 요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검증이 충실했는지의 행정·정치적 평가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구성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에게 인정되는 법률상 권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상대방과 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6. 사건기록에서 특정하여 확인할 증거

함상훈·이완규 후보 검증 업무분장, 인사검증 요청·회신 문서, 검증 생략 결정의 주체, 수석이 실제로 내린 지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7.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의 예비적 양형 요청

다른 고위 관계자의 의사결정을 민정수석에게 일괄 귀속시키지 말고 실제 보고·지시·승인 권한과 처리 기간의 특수성을 구분해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주시되, 확인되지 않은 반성·가족관계·건강을 선처 사유로 추정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8. 결어

특히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의 지휘 권한과 직권남용 요건를 상세한 증거로 확인하시어, 피고인 김주현의 행위 중 고의와 구성요건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십시오.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개인의 실제 역할에 상응하는 판단을 청합니다. 재판의 독립성과 증거에 따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확인 가능한 공개 출처 (보도는 공판조서·판결문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08.28 연합뉴스 |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결심공판